

임대창고 등 폐기물 불법 방치 예방·관리대책

- ❖ 최근 빈 공장을 임대한 후 불법폐기물을 투기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도의회와 언론 등에서 지속적인 문제 제기
- ❖ 임대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등 임대창고 내 폐기물 불법 방치 예방 및 부적정처리폐기물 특별관리 대책 보고임.

【 2022년 실국 주요업무계획 권한대행 강조사항 (2021.9.27.) 】

I 현실태 및 현황

□ 현실태

- 최근 감시망을 피해 빈 공장이나 창고를 임대하여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거나 임야, 나대지 등에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사회문제로 대두
 - 임대인은 실제보다 고가(高價) 임대료에 현혹되어 보관물품의 종류에 개의치 않고 창고를 임대하고, 임차인은 폐기물을 방치한 채 잠적
 - 감독기관(시군)의 한정된 인원으로 28,707개 폐기물 관련 업체(배출자-운반자-처리자)의 폐기물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에 한계
 - 울바로시스템 등 온라인으로 폐기물 이동경로 감시, 신고사업장에 대한 정기·수시 점검을 통해 위반사실 적발, 행정조치
- ※ 감시망을 벗어난 불법폐기물은 대부분 주민신고를 통해 발견되는 실정

□ 현 황

- 도내 최근 5년간 불법폐기물(방치, 투기) 처리현황 (단위 : 톤)

구 분	계	방치폐기물	불법투기
발 생 량	98,421	59,406	39,015
처 리 량 (처리율)	55,866 (56.8%)	33,116 (59.5%)	22,750 (61.9%)

○ 시군별 최근 5년간 불법폐기물 처리현황

(단위 : 천톤)

구분	계	진주	통영	사천	김해	밀양	거제	양산	의령	함안	창녕	고성	남해	산청
발생량	98.4	5.1	0.84	2.7	7.6	11.8	26	13	11	4	1.8	13.1	0.17	1.3
처리량 (%)	55.9 (56.8)	4.25 (83.3)	0.84 (100)	2.6 (96.3)	5.4 (71)	11.6 (98.3)	0 (0)	13 (100)	0.15 (1.5)	1.8 (45)	1.8 (100)	13.1 (100)	0.12 (70.6)	1.2 (92.3)

※ (미발생 5개 시군) 창원시, 하동군, 함양군, 거창군, 합천군

II 그간 추진상황

○ 2020. 7. :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 수립

○ 2020. 8. ~ 9. : 불법폐기물 관리강화 대책 관련 특별점검

점검 계획	점검 실적 (%)	위반 건수 (%)	위반내역						조치내역				
			계	무 허가	불법 투기	처리 기준	보관 기준	기타	계	영업 정지	고발	과태 료	기타
603	325 (54%)	12 (4%)	14	0	1	4	2	7	24	7	7	4	6

○ 2021. 4. : 환경부 주관 폐기물 부적정처리 의심업체 합동점검

점검 계획	점검 실적 (%)	위반 건수 (%)	위반내역						조치내역				
			계	무 허가	불법 투기	처리 기준	보관 기준	기타	계	영업 정지	고발	과태 료	기타
5	5 (100%)	4 (80%)	4	-	-	-	-	4	8	-	1	2	5

※ (위반내역) 기타 4건 : 관리대장 미작성 및 올바른시스템 부실·거짓 입력

○ 2021. 8. ~ 7. : 도내 취약사업장(빈공장, 임야 나대지) 사전조사

⇒ 폐기물관리 취약사업장 : 246개소(공장 241, 나대지 5곳)

○ 2021. 8. ~ 9. : 도 주관 불법폐기물 발생예방 합동점검 실시

점검 계획	점검 실적 (%)	위반 건수 (%)	위반내역						조치내역				
			계	무 허가	불법 투기	처리 기준	보관 기준	기타	계	영업 정지	고발	과태 료	기타
246	246 (100%)	9 (3.7%)	9	-	5	-	2	2	14	3	2	1	8

□ 부정정처리폐기물* 지속적 관리(반기1회)

○ 부정정처리 의심 폐기물 사전조사 및 도 주관 합동점검 실시

- 사전조사 : 울바로시스템, 항공사진, 민원신고를 통한 부정정처리 폐기물 추적 등 사전조사 실시
- 합동점검 : 부정정처리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명령 및 고발, 행정대집행을 통한 구상권 청구 등 위법행위 엄정조치
-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활용 행정대집행 및 조치명령 불이행 사업자 再고발 등 엄정조치로 미처리 불법폐기물 신속처리 독려

* 부정정처리폐기물 :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불법으로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

○ 폐기물처리업자 등 폐기물 관련 업자의 폐기물관리 역량 강화

- 폐기물 관련 업자 및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 담당자 교육 실시, 미수료자에 대한 과태료처분 확행

□ 임대업자(불법투기 잠재적 피해자) 대상 폐기물 방치 예방 교육

○ 부동산중개인 대상 불법폐기물 발생예방 및 교육·홍보

-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, 도 토지정보과 협조, 회원사를 통한 폐기물 방치·투기 사례 안내 등 피해예방 홍보
- 임대차 계약 시 불법폐기물에 대한 주의의무 및 책임소재 명시, 불법폐기물로 인한 환경피해 및 분쟁 사전예방

○ 불법폐기물의 처리책임자 범위 확대(폐기물관리법 제48조)

- 부정정 처리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(허용한 경우)
- 부정정 처리폐기물의 발생원인 되도록 요구·의뢰·교사한 자 등
- 폐기물의 배출·운반·최종처리, 재활용 및 처분에 관여한 자
- 울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

※ 행정처분 및 벌칙규정 : 조치명령,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

□ 주민신고체제 강화

○ 신고포상금제를 활용한 주민신고 활성화 유도

- 환경오염신문고(☎128), 시민생활불편신고(☎120) 등 신고센터 활용
- 신고포상금제 관련 최소 행정단위(읍·면·동사무소), 마을주민 홍보

○ 「불법 투기 단속공무원」 등 상시감시 체계 구축

- 시군 불법 투기 단속공무원(44명) 감시활동 강화
- 재활용품 분리배출 도우미를 활용(175명)한 불법투기 예방활동 강화
- 환경미화원, 산불감시원 등 기존인력(13,452명)의 일상 업무 수행 중 폐기물 불법 투기 행위 신고 협조

IV

향후계획

○ 폐기물 관리대책 시군 시달('21.11.22), 불법폐기물 취약사업장 사전 조사 및 합동점검(도-시군) 실시(매반기 1회, 19개반 38명)

- 유관기관 포함(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, 道 산림부서, 토지정보과 등) 관리대책 공유 및 협조요청('21.11.22)

○ 폐기물 관리대책 및 강화된 폐기물관리법('20.5.27. 시행) 적극 홍보

- 보도자료 제공('21.11.23.) 및 부동산중개인 교육('22년 상반기) 등으로 불법폐기물 사전예방 및 폐기물 관련업체 준수사항 홍보
- 반상회보('21.12.), 읍·면 이장단 회의 시 적극 홍보 조치

붙임 1. 불법(방치·투기) 폐기물 처리현황 1부.

2. 시군별 활용 가능한 불법폐기물 감시인력 현황 1부.

3. 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(2020.5.27.일 시행)내용 1부.

4. 전국 유형별 불법 투기·방치 사례(중앙 언론보도 중심) 1부.

5. '20~'21년 도내 폐기물 불법 투기 사례(지방 언론보도 중심) 1부.

□ 발생현황 총괄표

(단위: 톤)

구분	발생량			처리량			미처리량			처리율
	계	방치	투기	계	방치	투기	계	방치	투기	
계	98,421	59,406	39,015	55,866	33,116	22,750	42,555	26,290	16,265	56.8%
'20년 기준	96,939	58,922	37,886	54,641	32,831	21,810	42,166	26,090	16,076	56.4%
2년 추가확인	1,483	485	1,129	1,225	285	940	389	200	189	82.6%

※ 전국 161.6만톤 발생(2020년 기준) → 우리 도는 약 6%정도(9.8만톤) 발생

□ 도내 미처리 폐기물 현황

구분	지역	행위자	발생량 (톤)	추진상황	보관중 (톤)	비고
계	9개시군	11개소	43,129		42,555.2	처리율 1.3%
방치 ¹⁾ 폐기물	소계		26,290		26,290	
	사천시	해0자원	90	조치명령	90	-
	거제시	(주)새0산업개발	26,000	처리명령 및 고발	26,000	-
	함안군	광0비철	50	조치명령	50	-
	남해군	박0군	50	조치명령 및 고발	50	-
	산청군	해0라	100	조치명령 및 고발	100	-
불법투기 ²⁾ 폐기물	소계		16,839		16,265.2	
	진주시	이0서 외 17명	1,200	행위자 처리중	850	350톤 처리
	김해시	이0구 외 14명	2,400	행위자 처리중	2,196.2	203.8톤 처리
	밀양시	김0일	189	조치명령 및 고발	189	-
	의령군	(주)오0산업	10,800	수사중	10,800	-
	함안군 (2)	(주)해0환경 외 4명	2,000	폐기물 위탁처리중	2,000	-
		하0호	250	폐기물 위탁처리중	230	20톤 처리

1) (방치폐기물) 허가취소 및 폐업 등으로 폐기물처리업체의 사업장 내 법정 보관기일을 초과하여 방치된 폐기물

2) (불법투기 폐기물) 폐기물 배출자 또는 처리업체 등이 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하지 않고 임야, 임대부지 등에 무단 투기한 폐기물

참고2

시군별 활용 가능한 불법폐기물 감시인력 현황^(21.10월 기준)

(단위 : 명)

시군	합계	재활용품 도우미	이통장	임도 관리자	유해조수 포획반	산불 감시원	환경 미화원
경남도	13,452	175	8,243	58	605	2,306	2,065
창원시	2,961	16	1936	5	65	389	550
진주시	1,356	7	938	3	50	126	232
통영시	793	8	382	3	21	214	165
사천시	603	3	396	3	27	100	74
김해시	1,267	14	793	3	32	150	275
밀양시	535	2	335	3	33	95	67
거제시	768	12	394	5	32	120	205
양산시	571	51	300	3	31	80	106
의령군	379	1	238	3	34	76	27
함안군	428	2	255	3	40	88	40
창녕군	451	12	285	3	32	83	36
고성군	436	2	263	3	26	101	41
남해군	383	3	222	3	26	80	49
하동군	484	6	319	3	26	103	27
산청군	444	4	286	3	34	84	33
함양군	497	13	259	3	33	137	52
거창군	502	9	267	3	28	146	49
합천군	594	10	375	3	35	134	37

I

불법폐기물 발생 예방

□ 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·운반업자 주의 의무 강화

- (중전) 폐기물 배출자의 경우, 폐기물 처리 위탁 시 형식적인 수탁 능력 확인(수탁자가 스스로 발급한 확인서 확인)만 하도록 규정
 - 수집·운반업자가 불법폐기물이 적치된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더라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부재
- (개정내용)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는 폐기물 다량 배출자에 대하여 △위탁 시 위·수탁 기준을 준수하고, △위탁 후 위탁한 폐기물 처리 과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의무화

< 폐기물 배출자 주의 의무 >

구분	위·수탁 기준	처리 과정 주기적 확인
적용 대상	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대상자	- 건설공사 시 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 - 오폐수,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을 월 2톤 이상 배출하는 자, - 종합병원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, - - 폐유독물질을 배출하는 자 등
상세 내용	1. 수탁자로부터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것 2. 폐기물적정처리센터에서 공개하는 자료(행정처분, 판결사실 등)를 활용해 적법한 수탁자인지 확인할 것 3. 위탁계약은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, 계약기간 및 위탁비용 등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체결할 것 4. 위탁계약서는 3년 간 보관할 것	1. 1개월마다 위탁한 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를 올바로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것 2. 이상징후 발견 시 스스로 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통해 폐기물 폐기물 처리 현장을 확인할 것 3. 폐기물 부적정처리를 인지했을 경우, 즉시 폐기물 처리 위탁을 중단할 것

- 수집·운반업자는 행정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지 아니할 의무 부여 → 고의·중과실 시 처벌* 근거 마련

* (벌칙)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

□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 도입

- (종전) 최초 폐기물처리업 허가 後 해당 업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별도의 주기적인 확인 절차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영구히 지속
 - (개정내용) 모든 폐기물처리업자는 5년마다 해당 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을 확인받도록 하되, 해당 기간 법을 위반하지 않은 우수업체는 적합성 확인 주기를 2년 연장하는 인센티브를 부여
 - 법령 상 중요기준*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 적합성 확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, 행정청의 자의적인 적합성 확인 거부를 미연에 방지
- * (예시) 폐기물 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하지 아니할 것
폐기물처리업의 시설·장비 및 기술능력과 관련한 허가기준을 충족할 것

□ 권리·의무 승계 시 사전허가 제도 도입

- (종전) 양도·양수, 합병·분할, 경매 등으로 권리·의무가 승계되면, 불법 처리업자인 종전 명의자에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부재
- (개정내용) 폐기물처리업 등의 권리·의무 승계 시 △종전 명의자가 미이행한 법적 책임의 이행 계획, △새로운 명의자의 시설·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허가*를 받도록 하고,
 - * 다만 상속은 성격 상 사전허가가 어려우므로, 사후 신고로 갈음
 - 또한 권리·의무 승계 후에도 종전 명의자의 법적 책임은 소멸되지 않음을 명시

□ 의료폐기물 안정적 처리 기반 마련

- (종전) 지정폐기물의 일종인 의료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전용 처리시설에서만 소각할 수 있도록 규정
- (개정내용) 의료폐기물의 처리가 어려운 비상 時 예외적으로 위해성이 낮은 일반의료폐기물*은 지정폐기물 처분업체에서 소각할 수 있도록 함
 - * 봉대, 거즈, 일회용 주사기 등 감염성·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폐기물

□ 반입금지명령 제도 신설

- (종전)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등이 행정소송과 가처분(집행정지) 신청에 의해 무력화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

※ <의성> A업체에 '14년부터 3회 영업정지 처분 →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으로 장기간 지연 → 17만톤(허용보관량 80배)으로 증가

- (개정내용)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2배를 초과 시,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폐기물 반입금지 처분*을 할 수 있도록 하고,

* 다만, 부적정처리/방치/재난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

- 해당 업체가 폐기물을 허용보관량 이하로 낮출 경우, 폐기물 반입재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

□ 전자정보처리시스템(올바로시스템) 입력 대상 확대

- (종전) 폐기물 인계·인수 시 해당 내역을 올바르게 시스템에 입력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, 일부 폐기물* 정보의 입력이 누락

* <예> 폐기물 처분 및 재활용업체에서 1일 100kg 미만으로 처리되는 폐기물

- (개정내용) 폐기물 계량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처분 및 재활용 업체는 폐기물의 계량값을 올바르게 시스템에 자동 전송하도록 하고,

- 처분 및 재활용업체는 장부(반입, 배출, 처리량 등) 기록사항이 발생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올바르게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

□ 폐기물처리업 결격사유 강화

- (종전) 불법폐기물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자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

- (개정내용) 징역·금고·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*하고, 불법행위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**까지 결격사유로 명시

* △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, △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, △2천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, △허가 취소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** △허가취소자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업무집행을 지시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, △허가취소자 명의로 직접 업무를 집행해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

□ 불법폐기물의 처리책임자 범위 확대

- (중전)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자를 ①처리자, ②위탁자(형식적인 처리능력 확인 의무 위반 시), ③토지소유자로 협소하게 규정

※ △처리자의 처리 미이행, △위탁자(배출자 등)에게 처리 책임을 부여하기 어려운 구조 등으로 불법 폐기물 신속처리 곤란

- (개정내용) 불법폐기물의 배출·운반·최종처리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여되고, 법령 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를 처리 책임자*로 규정

* △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, △부적정처리폐기물이 처리된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제5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위탁한 자, △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고 법령 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배출자, △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배출, 수집·운반, 보관, 재활용 및 처분과정에 관여한 자, △부적정처리폐기물과 관련하여 올라로시스템에 인계·인수 내용 및 계량값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, △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원인이 된 행위를 할 것을 요구·의뢰·교사한 자 또는 그 행위에 협력한 자, △이상 책임자의 권리·의무를 승계한 자

□ 행정대집행 절차 개선

- (중전) 대집행 및 재산압류를 위한 사전절차*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, 이로 인해 책임자를 통한 비용환수 역시 어려움 존재

* 폐기물 처리·조치명령 부과 → 명령 미이행 → 대집행 계고 → 대집행 통지 → 대집행 실행 → 비용징수

- (개정내용) 긴급한 상황* 발생 시 폐기물 처리·조치명령을 하기 전에 대집행에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규정

- * ① 폐기물 처리 명령대상자를 대집행기관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
 ② 폐기물 처리 명령대상자를 대집행기관이 확인하였으나 명령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 ③ 대집행기관이 침출수 누출, 화재 발생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주변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 명령의 내용이 되는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긴급하게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
- 대집행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책임자를 대상으로 비용환수를 위한 조치(재산조회, 가압류 등) 실시 근거를 마련

□ 과징금 제도 개선

- (중전)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(최대 1억 이하)을 운영 중이며,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는 無
- (개정내용)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*하도록 하고,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**

* 폐기물처리업 운영에 따른 매출액의 2%(1차위반), 3%(2차위반), 5%(3차위반)

** △과징금 미납 시 영업정지 처분 근거를 마련, △과징금 처분 없이 곧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 하는 중요 법규 위반 사례를 규정

- 불법폐기물로 취득한 이익*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

* 불법폐기물의 양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 방법별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

□ 벌칙 상향

- (중전) 폐기물 불법처리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아 범죄 억제력 부족
- (개정내용) △벌칙 신설 및 △중전 과태료를 벌칙으로 상향

벌칙 수준	불법행위
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	-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한 자 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을 받은 자
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	- 반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	- 폐기물 다량 배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- 오폐수시스템 입력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- 출입·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 등

참고4

전국 유형별 불법 투기·방치 사례 (중앙 언론보도 중심)

□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결탁하여 불법처리('21.11.04. SBS 등)

-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조직폭력배와 결탁하여 전국 11곳의 빈 공장, 창고 등에 폐기물 불법 투기*

* 하차장운영자, 브로커, 바지사장, 문지기 등으로 역할 분담 후 경기, 충남, 충북, 경북, 전북 등 전국 11곳 사업장폐기물 4만 6천여톤 불법투기 적치 후 92억원 상당 부당이득 취득

- 바지사장 명의로 빈 공장, 창고 임차한 뒤 보증금 일부만 계약금으로 지불한 뒤, 잔금 지급일 도래 전 폐기물 투기
- 폐기물 일부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‘올마로시스템’에 등록처리



공장 적법 운영현장



빈공장·창고 임차 후 불법투기

□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법 처리('18.7.29. JTBC 방송 보도)

- 소규모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‘공사장 생활폐기물’을 건설폐기물 수집·운반업체가 운영하는 임시보관장*으로 운반

* 건설폐기물을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에서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 또는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도록 절단하기 위한 장소로써 시·도지사 승인 후 설치·운영

- 임시보관장에서는 고철 등 유가성 폐기물은 선별·매각하고, 나머지는 중간수익만 남기고, 처리 불가능한 재활용업체 등에 불법 처리*

* 수집·운반업체가 건설현장의 폐기물 배출자에게 톤당 약 30만원 처리비를 받고, 처리가 불가능한 재활용업체 등에 16~18만원을 주고 위탁 처리(정상처리비 약 24만원)

- 처리 불가능한 재활용업체 등에서는 사업장 부지 내 폐기물을 계속 반입하여 적체된 상태로 방치(충남 부여 등 전국 10여곳)

참고5

'20~21년 도내 폐기물 불법 투기 사례 (지방 언론보도 중심)

□ 나대지 내 불법투기 적발('21.10.12. 부산일보 등)

- 시세보다 4분의1 쯤값에 폐기물을 실어와 ○○시 소재 나대지*에 불법투기(1,200여톤) * 토지소유자에게 계약금만 지불 후 심야시간에 불법폐기물 매립
- 가림막 및 펜스 설치 후 약 한 달간 나대지에 불법으로 야적하다 주민신고로 적발 및 관할경찰청에서 수사개시
- 폐기물 관련자 구속(5명) 및 불구속(11명) 입건 후 현재 조사 중

□ 빈창고 내 폐기물 방치 후 도주('21.7.27. KNN)

- ○○시 한 창고임대업자는 수출할 페인트 원료(480톤)을 보관해 달라는 화물대행업자의 요청을 받고 보관하던 중 화물대행업자 잠적, 폐기물이 창고에 방치
- 임대인은 방치폐기물 투기자가 도주하여 처리책임 발생으로 인해 막대한 처리비용 부담
- ※ 「폐기물관리법」제48조에 따라 폐기물 배출자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, 임대업자에게도 불법폐기물의 처리의무가 있음

□ 해양쓰레기 빈 공장에 불법투기('20.6.18. 경남일보)

-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으로 배출된 폐그물, 폐어망 등을 ○○시 소재 빈 공장에 불법투기*
- * 인근 논주인의 신고로 ○○시청에서 현장 확인 후 행위자 고발
- ○○수협은 해양폐기물 수매사업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종합재활용 업체에 처리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나 제3자(행위자)가 ○○시 소재 빈 공장에 불법으로 야적(400여톤)하다 주민신고로 적발
- 종합재활용업체에서 처리된 폐기물과 ○○수협에서 바로 가져온 폐기물을 혼합하여 보관중이었으며 관련 사건은 행위자와 종합재활용 업체와의 연관성 등을 수사 중

□ 공장부지내 불법투기 급증('20.4.21. KBS뉴스)

- 그물과 어구 등 폐합성수지류 해양쓰레기를 전문 업체에서 처리하지 않고 빈 공장 등에 불법투기(1,300여톤)하다 주민제보로 ○○시청에서 확인
- 본 사건에서 알선자는 경매물건 또는 장기간 미운영 공장을 물색 하였고, 처리업체와 폐기물 불법투기를 공모
- 본 사건은 관할경찰서에 수사 요청하여 행위자를 적발하였으며, 알선자는 구속되었고 처리업체는 현재 조사 중